

북·중관계의 성격과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

장용석(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국문요약

이 글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대응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로서 협력과 의존, 자주와 갈등이 교차되는 탈냉전기 북·중관계의 성격과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살펴본다. 먼저 탈냉전기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혈맹이라기보다 전략적·비대칭적 협력관계로 볼 수 있다. 동맹의 기초인 전략적 이해관계와 안보위협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와 미·중간의 경쟁을 주목하면서 자신의 지정학적 가치를 부각시킨다. 북한은 또한 부상하는 중국이 대국이자 지배주의자로서 자신의 체제와 정권에 야기하는 위협성을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중국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고 자주성을 강조한다.

주제어: 전략적·비대칭적 관계, 세력균형 변화, 전략적 요충지, 자주, 경계심

I. 서론

최근 북한과 중국의 협력관계가 심화되면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

*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종속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남북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¹⁾ 북한이 중국의 동북4성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나²⁾ 중국의 동북공정과 연계하여 중국의 북한 및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 의도를 지적하기도 한다.³⁾

이러한 우려와 지적들은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데다 북한도 국제적인 고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들은 분명히 타당한 측면들도 지니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자생적 성장 가능성이 차단될 수도 있는데다, 경제적 의존도의 증가는 정치적·군사적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중국 자율성이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은 글로벌 파워로 도약하면서 지역 내 영향력을 급속하게 확대해 가고 있는 중국에 끌려들어가고만 있는 것인가? 현실주의

-
- 1)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배종렬, “최근 북·중 경제관계의 특징과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2010년 겨울호); 오승렬, “북·중경제관계의 구조와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소고,”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1호 (2010); 유승경,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 깊어지고 있다,” 『LGERI 리포트』 (2010년 9월 29일); 이종석, “북-중경제협력의 심화: 특징과 함의,” 『정세와 정책』 (2011년 7월호); 김영운, “중국의 대북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한국의 과제,” 『정책과학연구』, 제20집 2호 (2011).
 - 2) 남성욱,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5호 (2006).
 - 3) 이용희, “북한 경제의 중국 예측화 현상에 대한 이해와 대응,” 『국제통상연구』, 제14권 1호 (2009); 원동욱, “동북공정의 내재화, 중국 동북지역 인프라개발의 전략적 함의,” 『국제정치논총』, 제49집 1호 (2009).

적인 국제관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⁴⁾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와 경제협력 심화가 야기할 정치적 부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특히 지난 역사에서 중국의 대국주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던 기억을 갖고 있고 탈냉전 초기 국제적 고립을 ‘강요당하였던’ 아픈 경험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대미관계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그나마 일본과의 관계도 사실상 완전히 단절된 데다⁵⁾ 남한마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의존도 심화를 감수하면서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으나 그 이면에서 끊임 없이 의존도 분산 또는 완화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12월 급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산을 언급하면서 “대국들의 틈에 끼여 파란 많던 이 땅을 영영 누구도 넘겨다보지 못하게, 약소민족의 한 많던 민족을 가슴을 당당히 펴고 세계를 굽어보며 사는 존엄 높은 인민으로 영원히 되게 하여준 우리의 핵과 위성”이라며⁶⁾ 핵무기 개발을 주변 대국⁷⁾으로부터 자주성을 지킬 수단으로 거론한 것은 북한이 안고 있는 고민을 보여준 것이다.

4) 우승지,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제관계론 이해,” 현대북한연구회 엮음, 『김정일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서울: 한울, 2009); 최종진, “북한의 세계관에 나타난 국제정치이미지 분석—이미지 이론을 중심으로,” 이수훈 편, 『북한의 국제관과 동북아질서』 (서울: 한울, 2011) 참조.

5) 나미나, “일본의 대북외교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11월호) 참조.

6) 리동찬, “김정일 동지의 혁명 유산,” 『로동신문』, 2011년 12월 28일.

7) 북한은 제국주의자들과 함께 ‘대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 책동도 단호히 물리치고’ 자주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로승일, “우리식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국제관계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존중하는 민주주의,”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53권 4호 (2007), p. 19). 이때 북한을 고립압살하고자 하는 제국주의는 미국을 의미하고, 자주성 견지를 민족주의나 고립주의로 비방하며 압력을 가하고 내정에 간섭하면서 경제통합까지 강요한 대국주의자는 중국이나 구소련 등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언급하는 ‘대국’에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포함된다.

이 글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대응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로서 협력과 의존, 자주와 갈등이 교차되는 북·중관계의 성격과 특히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살펴본다.⁸⁾ 분석 시기는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탈냉전기이지만 주요 시기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이다. 이 시기 북한의 공식보도매체 등 공간문헌과 탈북인사들의 글, 북한이나 중국의 당국자들 언급이나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 등을 통해 부상하는 중국과 그로 인한 지역질서 변화 등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검토된다. 2절은 이를 위한 논의의 기초로서 북한과 중국 관계의 성격을 살펴본다. 1961년 체결된 북·중동맹조약이 폐기 또는 수정되지 않았기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공식적으로는 ‘동맹’관계라고 볼 수 있지만,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나 안보위협평

8) 북한의 구체적인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지면관계 상 살펴보지 않는다. 한편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많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중국의 대북정책이나, 북한과 중국 양자관계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양국 관계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 소위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드물다. 특히 북한이 주체의 나라로서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더욱 희박하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허문영·마민호,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11)’과 ‘김예경,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대응전략: 편승전략과 동맹, 유화 그리고 현안별 지지정책,” 『國際政治論叢』, 제47집 2호 (2007), ‘Kim, Sung Chull, “North Korea’s Relationship with China: From Alignment to Active Independence,” in Lam Peng Er and N. Ganesan, Colin Dürkop, eds., *East Asia’s Relations with a Rising China* (Seoul: Konrad Adenauer Stiftung, 2010)’ 등이 있다. 허문영·마민호는 갈등적 편승이라는 틀에서 북한의 대중전략을 분석하고 김예경은 방어적 편승 개념을 중심으로 북한의 대중국 대응을 분석하고 있는 반면 김성철은 북한의 자주성을 주목한다. 편승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북한의 대중국 불신과 그에 따른 자주성 견지의 정치·군사적 함의를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고 있으나, 김성철의 경우 북한이 중국을 혈맹에서 배신자로 인식하고 중국에 대한 입장이 지지(alignment)에서 자주(independence)로 이동하고 있음을 지적한 점이 주목된다.

가가 달라지면서 양국관계는 동맹이라기보다 전략적·비대칭적 협력과 의존관계로 변화되었음을 주목한다. 3절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이 중국의 부상에 따른 지역 내 세력균형 변화와 그 속에서 자신의 지정학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음을 밝힌다. 이는 북한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상하는 중국에 편승⁹⁾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정치·군사적 자주에 더욱 매달릴 수 있음을 의미하고,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미국뿐 아니라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자주성 견지 전략의 일환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II. 북·중관계의 성격

1. 전략적 협력과 갈등

북한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혈맹이라고 불릴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는 김일성 전 주석을 비롯한 북한의 건국세력이 항일무장투쟁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중국 공산당이 일제 패망 후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과¹⁰⁾ 한

⁹⁾ 편승(bandwagoning)은 한 국가(smaller actor)가, 안보위협뿐 아니라, 현재 또는 미래의 보상(rewards)을 위해 탁월한 강대국(great power)을 정치·군사적으로 지지하는(alignment) 대신 다른 강대국과는 거리를 두는 제로섬(zero-sum)적 특성을 보이면서 강대국에 대해 지배-종속(superior-subordinate)의 관계 수용도 감수하는 것이다(Kuik, Cheng-Chwee, "The Essence of Hedging: Malaysia and Singapore's Response to a Rising Chin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30, no. 2 (2008), pp. 168-169.

국전쟁 시기 중국이 소위 ‘항미원조’를 통해 북한을 지원했던 역사에서 비롯된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또한 공식적으로 동맹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1961년 7월 11일 군사동맹조약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동 조약 2조에는 체약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할 경우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이 조약은 쌍방의 합의가 없이는 수정 또는 폐기될 수 없게 되어 있다. 북한과 중국은 냉전기와 동서테랑트 그리고 탈냉전기를 거치면서도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이 조약을 수정 또는 폐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역사적이고 법적인 측면에서 ‘피로 맺은 동맹’이다.¹¹⁾

이런 이유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관계도 안보분야를 중심으로 동맹과 그에 따른 딜레마라는 틀에 따라 분석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북핵문제로 인한 연루와 북한의 동맹포기 가능성 사이에서 동맹으로 인

10) 북한은 국공내전 당시 중국 공산당의 후방기지로서 북부지역과 전략적 교통로를 제공하였고 전략물자 등을 지원하였다(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2000), pp. 45-77).

11) 중국은 냉전기와 달리 탈냉전기 들어 ‘동맹’을 추구하지 않고, 이념을 앞세우지 않고 국가 간에 상호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제로 동반자 개념에 입각해 외교관계를 정립해가고 있다(김홍규, “중국의 동반자 외교 小考: 개념, 전개 및 함의에 대한 이해,”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2호 (2009), p. 290). 북한은 이런 중국이 현재 유일하게 동맹조약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최명해, “북·중조약의 현대적 함의와 북·중관계 전망,” 『중북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과 한미동맹』,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2011년 9월 1일, p. 9].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전통우호합작관계’라는 말을 사용하지만(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政策规划司 编, 『中國外交 2011年版』 (北京: 世界知识出版社, 2011), p. 103) 이는 북한과의 동맹적 성격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p. 338).

해 발생하는 딜레마를 관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이것이 중국의 북핵 정책으로 나타났으며¹²⁾ 중국은 북한을 방기하거나 북한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야기하는 위험성을 감안하여, 천안함 문제와 관련하여 대북제재에 반대함으로써 북한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¹³⁾ 또한 동맹관계에 있는 강대국의 약소국 통제와 약소국의 강대국 결박이라는 틀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설명되기도 한다. 이런 틀에서 북한의 모험주의적 행태는 자폭적 위협을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전략으로 평가된다.¹⁴⁾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동맹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은 특정한 사안, 특히 안보현안에 대한 설명에서는 일정하게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안보분야뿐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형성되고 이들은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충돌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안보분야의 관계적 특성만으로는 상호 협력하면서도 갈등하는 역동적인 국가 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북한과 중국 간에도 경제적인 상호협력이 심화되면서도 정치적인 갈등이 노정되기도 하고 특히 안보분야와 경제나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과 갈등이 충돌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동맹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특히 탈냉전

12) 박홍서,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북 동맹안보딜레마 관리 연구: 대미관계 변화를 주요동인으로,” 『國際政治論叢』, 제46집 1호 (2006).

13) 원동욱·김재관, “중국의 대북정책과 동맹의 딜레마: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2집 1호 (2011).

14) 김동성, 『한반도 동맹구조와 한국의 신대외전략』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p. 52.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도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북한 결박의 수단으로 동맹조약의 존속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적 균형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결박 수단으로서 동맹이 지닌 특성을 주목하여 북·중동맹관계의 성격을 분석한 글로 최명해, “북·중조약의 현대적 함의와 북·중관계 전망” 참조.

기에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인 이해관계나 안보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등이 서로 달라지면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외연의 확장성과 다양한 정책에 대한 포용성을 지닌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 개념이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더 적절할 수 있다. 전략적 파트너십은 고전적인 균형과 편승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용되는 관여와 저항(engage and resist) 또는 헤징 전략(hedging strategies)들을 보여준다. 전략적 파트너십은 타국가와의 공식적인 군사동맹 체결은 제약하지만 다양한 강대국들과 유사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¹⁵⁾

실제로 탈냉전기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전통적인 혈맹관계가 형해화되면서¹⁶⁾ 이해관계의 공유에 기초한 협력관계로 점차 변하고 있다.¹⁷⁾ 탈

15) Vidya Nadkarni, *Strategic Partnerships in Asia: Balancing without Alliances* (New York: Routledge, 2010), p. 45.

16) 이상숙, “북·중우호조약의 현대적 함의와 양국관계,” 『주요국제문제분석』 (2011년 가을호); 朱鋒, “中朝关系中的同盟因素: 变化与调整,” 『중북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과 한미동맹』,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2011년 9월 1일). 주평은 북·중 간의 동맹에 어울리는 군사협력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맹 관계가 공동화되었고 중국이 예측 가능한 장래에 동맹국으로의 책임을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17)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Andrew Scobell, “China and North Korea: The Limits of Influence,” *Current History* (September 2003); International Crisis Group, “China and North Korea: Comrades Forever?,” *Asia Report*, no. 112 (February 2006); 박창희, “지정학적 이익 변화와 북·중동맹관계: 기원, 발전, 그리고 전망,” 『중소연구』, 통권 제113호 (2007); 이태환, “북·중관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대외관계』 (서울: 한울, 2007);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서울: 선인, 2007); International Crisis Group, “Shades of Red: China’s Debate over North Korea,” *Asia Report*, no. 179 (November 2009); 장공자, “북한의 대중협상전략과 우리의 대응전략,” 『통일전략』, 제9권 2호 (2009); 최명해, “북한의 대중 의존과 중국의 대북영향력 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2010년 여름호); 김강일, “북·중관계 현황과 변화전망,”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와 재외

냉전기에 북한과 중국 간에 벌어진 최대의 사건은 중국이 북한의 사실상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것이다.¹⁸⁾ 이는 북한을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이기도 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동유럽이 급격한 체제전환의 과정에 들어가고 특히 90년대 초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시기의 진영외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는 1990년 소련이 남한과 수교한데 이어 1992년 중국마저 남한과 수교함으로써 절정에 달하였다. 북한의 혈맹이었던 중국과의 상호관계도 달라졌다. 이해관계의 불일치 또는 상충이 발생하고 이는 관계의 성격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도 ‘북한과 중국의 동맹은 끝났다’고 언급하였다.¹⁹⁾

동포사회의 통일외식』, 평화문제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2010년 10월 14일) ; Kim Sung Chull, “North Korea’s Relationship with China: From Alignment to Active Independence”; 서보혁, “북·중·러 3국의 협력 실태에 관한 세 가지 질문,” 『통일과 평화』, 제3집 2호 (2011) ; 이기현,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동맹의 동학』, JPI 정책포럼, no. 2011-15 (2011) ;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 김홍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및 역할,” 제122회 홍사단 금요 통일포럼 발표문 (2012년 3월 23일), (<http://uni.yka.or.kr/yka/board.php?board=pdxforum&command=body&no=57>).

- 18) 한중수교와 관련, 김정일 위원장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앞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며 주체사상과 핵무기, 미사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한다(제신, “등관주도하적 중공내정외교,” [1993년 6월호] ; 허문영·마민호,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p. 63에서 재인용). 또한 이 당시 북한의 권력층과 주민들 속에서는 중국에 대한 배신감, 국제적 고립감, 체제 생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였고 심지어 중국은 북한의 후방이 아니라 적진이라는 인식도 나타났으며, 외교라인에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한중수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뿐 아니라 중국의 핵심이익인 대만과의 관계를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거론되었다고 한다(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p. 167).
- 19) 매들린 올브라이트, 백영미 외 역, 『마담 세크리터리(Madam Secretary)』 (서울: 황금가지, 2003), p. 367.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에게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개방하면서 두 나라와 북조선(북

탈냉전기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서 가장 크게 주목할 것은 이념적 동질성이나 정서적 유대가 사실상 사라진 데다 전략적 이해관계와 포괄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평가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중국은 1978년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 지속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해왔고, 정치적으로도 공산당 지배체제는 유지되고 있으나 전체주의적 특성보다는 권위주의 양태를 보이고 있다.²⁰⁾ 반면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최고영도자의 유일적 지배체제를 추구하면서 3대에 걸친 권력세습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항일무장투쟁기나 한국전쟁 시기에 맺어진 인적 유대도 사실상 끊어졌다.²¹⁾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였던 세대가 거의 사라지고 없는데다 중국에서는 5세대 지도부가 등장하고 북한에서도 김일성 전 주석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 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혁명과 참전의 경험을 공유한 세대가 양국의 지도부에 포진하여 양국 관계를 만들어가던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 관계의 성격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이다.²²⁾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주도적 행위자로 부상하고, 아직까지 지구적 차원에서 공공재를 공급할 수준은 아니지만 국제 경제 질서 유지 및 변화나 주요한 안보 현안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에 따라 국제적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안정은

한)의 군사동맹이 소멸된 지 10년이 지났다”고 언급하였다.

20)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p. 339.

21)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p. 290 ;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p. 338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pp. 343~344.

22) 최명해, “북한의 대중 의존과 중국의 대북영향력 평가,” pp. 81~85.

중요한 정책 목표일 수 있고, 그를 달성하기 위한 대북정책 방향은 안정적 상황 관리와 변화 촉진이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관리와 변화촉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핵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하여 북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핵문제까지도 해결하겠다는 입장에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기 시작하였다.²³⁾ 중국의 이러한 대북정책은 북한의 입장에서 자국에 대한 개혁개방 요구와²⁴⁾ 영향력 확대 그리고 핵개발 포기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 압력으로 나타난다. 반면 아직도 냉전적 대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개혁개방에 대한 요구가 정권과 체제의 안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 핵개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중국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핵개발도 정치적 자주의 상징이자 주변 강대국에 대한 레버리지로서 쉽게 포기할 수 없다.

북한과 중국이 혈맹에서 탈피하여 전략적인 협력과 갈등관계로 전환되는 또 다른 핵심요인은 양국의 포괄적 안보위협 평가가 상이하다는 점이다.²⁵⁾ 냉전시대에 북한과 중국은 사회주의 종주국인 구소련에 대한 평가에서 입장을 달리하였다. 중국은 1960년대 소련과 노선 및 국경 분쟁 등을 거치면서 소련을 주적으로 삼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연미제소(聯美制蘇) 전략

23) 王緝思, “朝核问题与当前中韩关系,” 『2010 한중평화포럼: 한중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비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학술회의 (2010년 9월), p. 41 ; 김강일, “북·중관계 현황과 변화전망,” p. 40.

24) “Chinese premier meets Kim Jong Il,” *Xinhua*, May 7, 2010. 당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북한에 소개해주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를 발표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사실상 공개적으로 개혁개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25) 최명해, “북한의 대중 의존과 중국의 대북영향력 평가,” pp. 851~86 ; 김동성, 『한반도 동맹구조와 한국의 신대외전략』, pp. 124~125.

이 그것이다.²⁶⁾ 반면 북한은 구소련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소분쟁의 틈새에서 구소련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면서 경제적 실리도 적극 도모하였다.²⁷⁾

1970년대 이후 북한과 중국은 미국이 야기하는 위협에 대한 평가에서 커다란 차이를 드러냈다.²⁸⁾ 1960년대 말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시작된 마중 간에는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이어 1979년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졌다.²⁹⁾ 그리고 탈냉전기에 들어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 따라 중국과 미국은 전략적 공존의 틀 안에서 경제전략대화와 국방장관회담 등 협의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반면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관계를 청산하지 못하였고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탈냉전기 들어 북한과 중국은 남한에 대한 평가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냈다. 중국은 1992년 남한과의 관계정상화 이후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까지 발전시켰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남한과의 군사적 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남한에 의한 북한 체제붕괴 유도과 흡수통일 가능성마저 우려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은 미국이나 남

26)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p. 276.

27)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pp. 237~245.

28)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pp. 292~302.

29) 북한은 미·중 수교과정에서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공조외교를 진행하였으나(이종석, 『북한-중국관계』, pp. 253~259) 다른 한편에서는 마중수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허문영·마민호,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pp. 29~30). 북한은 자주성 옹호와 반제국주의 역량강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중국의 대미수교를 ‘제국주의 세력과의 무원칙한 타협’이라고 비판하며 ‘혁명의 근본이익을 팔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표출하기도 하였다(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1980년 10월 10일),” 『김일성 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360~363).

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이들과의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반면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인 협력대상을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2. 비대칭적 상호의존

북한과 중국은 약소국과 강대국 간의 비대칭적 상호의존(asymmetric interdependence)의 특성도 보이고 있다.³⁰⁾ 비대칭적인 상호의존이 힘의 불균형을 전제하지만 그렇다고 강대국이 상대적인 약소국에게 자신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지는 못한다.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양자 간의 교환은 불평등할 수 있지만 교환은 대개 강대국이 약소국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인 약소국은 양자 관계를 강대국보다 더 중요하고 민감하게 여길 수 있다. 다양하고 폭넓은 의제를 가진 강대국은 상대적으로 자국 내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반면 상대적 약소국은 국내문제보다 국제관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이는 비대칭적 상호의존 관계 하에서 약소국이 강대국보다 더 큰 기회와 위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자 간에는 비대칭성으로 인한 오해도 발생할 수 있다. 약소국의 강대국 존중(deference)과 강대국의 약소국 자율성(autonomy) 인정 관계

30) Samuel S. Kim and Tai Hwan Lee, *North Korea and Northeast Asia*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2); 이상숙,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의 북·중관계: 불안정한 북한과 부강한 중국의 비대칭적 협력 강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4호 (2010); 최명해, “북한의 대중 의존과 중국의 대북영향력 평가,” p. 76.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비대칭적 상호의존에 대해서는 Brantly Womack, “Asymmetry Theory and China’s Concept of Multipolarit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3, no. 39 (May 2004); Brantly Womack, *China among Unequals: Asymmetric Foreign Relationship in Asia* (Singapore; Hackensack, N.J.: World Scientific, 2010) 참조.

에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약소국의 입장에서 강대국의 존중에 대한 요구가 자율성 침해로 인식될 수도 있다.³¹⁾ 그리고 이러한 오해들이 악순환에 빠지면서 위기가 증폭될 수도 있다.³²⁾

비대칭적 상호의존과 관련하여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영향력이 영토나 인구, 경제력이나 군사력 등 경성국력의 크기와 반드시 비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체계 내에서 국가의 행위는 국가 간의 힘의 관계와 그 차이에 의해 결정되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의 크기가 아니라 상대적인 영향력이다.³³⁾ 초강대국이 약소국과의 대결에서 항상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초강대국의 경우도 전능한 것은 아니며 약소국도 전적으로 취약한 것은 아니다.³⁴⁾ 약소국은 강대국 간에 협력보다 갈등이 고조될 때 협력대가를 극대화하면서 협상입지를 강화할 수 있고, 경쟁하는 강대국과 인접해 있거나 국제적 거래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을 경우 지정학적이점을 활용하여 입지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인종적 단일성이나 기본적인 가치와 관련된 정치엘리트들의 통일성, 주민들의 의지 결집능력, 강대국의 다자적 관계와 다양한 대응현안에 비해 양자적 관계 중심의 적은 대응현안에 대한 역량 집중, 고도로 집중되고 안정적인 정권의 의사결정체계 등을 기초로 강대국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약소국은 또한 강대국을 상대하면서 자신의 취약함을 무기로 강대국을 협박할 수도 있다.³⁵⁾

31) 이와 관련 공격적 현실주의와 방어적 현실주의의 상대방 의도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전략선택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적 설명에 대해서는 David M. Edelstein, "Managing Uncertainty: Beliefs about Intentions and the Rise of Great Powers," *Security Studies*, vol. 12, no. 1 (autumn 2002) 참조.

32) Womack, "Asymmetry Theory and China's Concept of Multipolarity," pp. 359~363.

33) Michael Hendel, *Weak State in the International System* (London: Frank Cass, 1981), p. 10.

34) *Ibid.*, p. 104.

35) Ulf Lindell and Stefan Persson, "The Paradox of Weak State Power: A Research and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특성들이 존재한다. 북한은 해양 세력인 한·미·일 간 남방삼각에 맞선 대륙세력인 북·중·러 간 북방 삼각의 꼭지점으로서 자신이 지닌 지정학적 이점과³⁶⁾ 중소 또는 미·중 간의 갈등,³⁷⁾ 정치적 통일성과 주민결속, 좁은 현안에 대한 역량 집중, 취약함을 무기로 삼은 협박 등을 기반으로 자주를 견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강대국인 중국의 반대와 자제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또는 인공위성 발사로 포장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 이는 중국의 대북영향력이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역설적으로 북한의 대중국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³⁸⁾

Literature Overview,” *Cooperation and Conflict*, vol. 21, no. 2 (1986), pp. 81-91.

- 36) 우승지,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제관계론 이해,” p. 126.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세력의 전쟁정책을 막는 역지력이 핵개발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 37)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협력에 대한 경계심을 양국 간 갈등 가능성에 대한 강조로 표현한다. 조택범, “전략적 리해관계를 둘러싸고 심화되는 모순,” 『로동신문』, 2011년 1월 13일; 리학남, “대립되는 리해관계, 마찰의 불씨,” 『로동신문』, 2011년 5월 23일; “공연한 생트집, 미국의 『중국군사위협론』,” 『조선중앙통신』, 2011년 9월 7일; 리영, “무기판매를 둘러싸고 격화되는 중미갈등,” 『로동신문』, 2011년 10월 3일; 리학남, “풀릴 수 없는 대립관계,” 『로동신문』, 2011년 11월 7일 등 참조. 2011년 1월 13일 기사는 후진타오 주석의 1월 18일 방미를 앞두고 나왔으며 2011년 5월 23일 기사는 5월 9~10일 열린 마중 간 경제전략대화 직후에 나왔다.
- 38) 중국의 대북영향력에 대해서는 이상숙,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의 북·중관계: 불안정한 북한과 부강한 중국의 비대칭적협력 강화”; 최명해, “북한의 대중의 존과 중국의 대북영향력 평가”; Scobell, “China and North Korea: The Limits of Influence” 참조. 이와 관련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동맹의 틀에서 분석하되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이라기보다 내정불간섭형 비대칭동맹이라는 시각에서 북한의 자율성을 주목한 연구도 있다(이종석, “중·소의 북한 내정간섭 사례연구: 8월 종파사건,” 『세종정책연구』, 제6권 2호 (2010), pp. 383-385). 이종석은 약소국과 강대국이 맺는 비대칭 동맹관계에서 강대국이 안보를 제공하는 대신에

Ⅲ.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

1. 세력균형 변화와 지정학적 가치 강조

북한은 국제관계에 대한 현실주의적 인식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관계 담론에서 국가와 민족을 국제관계 주요 단위로 강조하고 이분법적 사고 하에서 협력보다는 갈등과 대결을 주목하며, 군사력을 중시한다.³⁹⁾ 이는 세계정치를 자주적 역량과 제국주의자 간의 대립으로 보고 약소국에 대한 최고의 안보위협은 국가자율성에 대한 제국주의자의 간섭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북한은 이에 맞서기 위해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군사력을 강조하면서 자주권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다. 따라서 동맹정책은 최소의 수준에 그치게 된다.⁴⁰⁾

약소국으로부터 얻는 대가를 자율성 이익에서 특별한 전략적 이익으로 바꾸게 되면, 약소국 정권의 주권 의지와 대외적인 기회구조의 활용 여하에 따라서 '전형적인 비대칭동맹'과는 다른 '내정불간섭형 비대칭동맹(non-intervention asymmetric alliance)'이 출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약소국의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안보 이익과 특별한 전략적 이익이 교환되는 동맹의 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북한-중국 관계는 일반적인 비대칭동맹의 핵심 특징인 강대국의 약소 동맹국에 대한 '자율성 제약-내정간섭'이 보이지 않는 내정불간섭형 비대칭 동맹이다(이종석, "중·소의 북한 내정간섭 사례연구: 8월 종파사건," 『세종정책연구』, 제6권 2호 (2010), pp. 383~385). 이러한 시각은 북한과 중국 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상호간 내정불간섭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 2010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 양국 간에 내정을 포함하여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3대 세습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필요로 하고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위한 북한 관리가 필요하였기에 이루어진 합의로서, 향후 북중관계의 성격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³⁹⁾ 우승지,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제관계론 이해," pp. 107~113.

북한은 이러한 현실주의적 국제관에 입각해 세계적 차원과 아시아 지역 차원의 세력균형 변화를 주목한다. 북한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국제무대에서 세력균형이 파괴된 것을 기회로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수립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세력균형 변화를 주목한다.⁴¹⁾ 아시아지역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새 세기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 군사력 균형에서는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 인디아 등 여러 나라들이 신흥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 이로부터 미국은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구실로 우리나라(북한)와 중국을 비롯한 나라들의 『군사적 위협』을 들고 나오고 있다”라거나⁴²⁾ “현시기 국제정치 중심은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한 미국과 유럽의 쇠퇴, 일부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의 국력강화 등은 랭전종식 후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힘의 균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은 위태로운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관여에서 찾고 있다”고 주장한다.⁴³⁾ 이는 미국의 쇠퇴와 국제질서의 다극화,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 등의 부상과 그에 따른 지역질서 변화를 주목하는 인식들이다. 북한은 특히 중국 등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잠재적 경쟁자이자 적수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미국의 잠재적인 경쟁적수로 되고

40) 최종건, “북한의 세계관에 나타난 국제정치이미지 분석-이미지 이론을 중심으로,” pp. 23~31.

41)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조선중앙통신』, 2011년 1월 28일.

42) “미국의 새 군사전략보고서는 무엇을 시사하는가,” 『조선중앙통신』, 2011년 3월 2일.

43) “군사적 패권 유지를 노린 무모한 망동,” 『로동신문』, 2011년 12월 7일. 이와 관련 북한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로동신문의 사설 등을 통해 중국의 국제적인 지위 상승과 세계의 다극화를 주목하는 인식을 간헐적으로 표출해왔다(김예경,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대응전략: 편승전략과 동맹, 유화 그리고 현안별 지지정책,” p. 80).

있는 대국들이 집중되어있다. 인구수에서 세계적으로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의 책략가들은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확보 여부에 따라 저들의 세계전략의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의 ‘아시아 복귀’ 이면에 중국 등의 부상이 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평화와 안정을 위해 세력 균형유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북한은 “세계적 규모에서 군비경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자면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려는 위험한 시도들이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한 요구”라며 세계적 차원의 세력균형을 강조하고⁴⁴⁾ “미국이 추구하는 다각적인 군사적 동맹관계구축은 이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파괴하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특히 동북아시아지역은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방대한 무력이 대치되어 있는 열점지대이다. 이 지역에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고 전략적 경쟁자, 잠재적 적수들에 대한 군사적 압박정책을 실시하려는 것은 화약고우에서의 불장난과 같은 극히 위험하고 무모한 짓”이라고⁴⁵⁾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북한은 자신의 지정학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은 “미국은 조선반도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이곳을 틀어쥐지 않고서는 아시아대륙을 지배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 유라시아대륙에 대한 군사적 포위환을 형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자신의 지정학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⁴⁶⁾

44) “전략무력분야에서 심화되는 로미대립,” 『조선중앙통신』, 2011년 10월 28일.

45) “침략적 3각 군사동맹 형성을 노린 망동,” 『조선중앙통신』, 2011년 11월 17일.

46) 조택범, “아시아태평양 『중점외교』에 비긴 흥계,” 『로동신문』, 2011년 12월 2일 ; 리현도, “동북아시아에서 랭전구도는 제거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2011년 3월 10일. 북한은 중국을 미국의 잠재적 경쟁자로 보고 미·중 간의 대결구조에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의 관계는 순망치한(唇亡齒寒)과 같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 급서 이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선전하면서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의 권력승계를 정당화하면서 전략적 요충지론을 내세운다. 즉 “탁월한 영도자”인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조선은 큰 나라들의 짬에 끼여서 각축전의 무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정학적 숙명론을 부정하고 ‘조선’이 불리한 위치가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라고 결론 내렸으며, 최근년에 “적대국들에 맞서 연전연승한” 바탕에 이러한 “전략적 요충지 사상”이 있다고 선전한다.⁴⁷⁾ 이는 물론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배짱과 영도실력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지만 북한의 ‘큰 나라’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지정학적 가치 및 위상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축이 만들어지고,⁴⁸⁾ 특히 동북아 지역 내에서는 이미 세력균형이 변화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지정학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존재하지 않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 1,400여 km에 달하는 방어선을 상실하는 셈이 되고 요동반도와 발해만의 출구가 봉쇄되며, 수도를 옮기지 않으려면 10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여 방어선을 새롭게 구축해야 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어우양산 저, 박종철·정은이 역, 『중국의 대북조선 기밀파일』 (서울: 한울, 2008), pp. 46~47).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지닌 지정학적 가치를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북한도 이를 바탕으로 대중국 협상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47) 김지영, “일심단결의 중심에서 최고사령관의 령도력-3,” 『조선신보』, 2012년 3월 17일.

48) 김예경,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대응전략: 편승전략과 동맹, 유화 그리고 현안별 지지정책,” p. 80.

2. 중국에 대한 경계와 자주성 강조

북한의 입장에서는 부상하는 중국이 제공하는 협력기회의 확대를 우선적으로 주목하면서도 그러한 중국이 북한체제와 정권에 야기할 수 있는 부담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김정일 위원장을 포함해 당국자들의 언급이나 북한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확인된다.

먼저 북한은 중국의 발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간의 협력확대를 모색한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의 경제성장 등을 언급한데서 확인된다. 김정일 위원장의 언급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동북진흥계획과 그에 따른 동북지역 발전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하면서 ‘세기적인 낙후성을 털어버리고 활력에 넘쳐 첨단 의 높이에서 조화롭게 전진하는 대련시의 전변’, ‘대련시를 비롯한 동북 지역의 급속한 발전은 중국당과 정부가 제시한 동북진흥전략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여실히 증명’, ‘대규모의 현대적 향으로 발전한 천진항과 활력이 넘쳐나는 천진시내’,⁴⁹⁾ ‘중국인민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는데 대하여 평가’,⁵⁰⁾ ‘날을 따라 변모되는 동북지역의 발전상을 직접 목격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 놀라운 전변은 중국당과 정부가 제시한 동북진흥전략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일대 과시’,⁵¹⁾ ‘활력에 넘쳐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는 중국의 동북지역과 화동지역’, ‘경제와 문화, 첨단과학기술분야를 비

49)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동북지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10년 5월 7일.

50)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10년 5월 8일.

51)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10년 8월 30일.

못하여 드넓은 중국대륙에서 이룩되고 있는 성과들에서 급속히 변모되고 있는 중화대지의 약동하는 발전상⁵²⁾ 등 다소 의례적일 수도 있지만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이룩한 경제성장을 높이 평가하고 축하하였다.

이와 함께 김정일 위원장은 “조중 쌍방이 많은 측면에서 서로 배우고 경험을 교류해야 한다”며⁵³⁾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북한이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동북아라는 지역적 틀 속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으로도 이어지고 있다.⁵⁴⁾

그러나 북한은 중국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을 감추지 않는다. 북한이 중국을 불신하는 것은 김일성 전 주석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일성 전 주석은 간부들과의 비공개 협의에서 “중국 사람들을 너무 믿다가는 자칫 등 뒤에서 칼을 맞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⁵⁵⁾ 이는 물론 1956년 8월 중파사건이나 1992년 한중 수교와 같이 북한이 중국의 내정간섭을 당하거나 중국으로부터 배신당했다고 느낀 역사적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다.

김정일 위원장도 중국에 대한 불신을 미국이나 남한 인사들에게 직접 밝혔다. 김정일 위원장으로서의 북·중 관계에서 발생한 내정간섭 등 역사적 사건들이나 정권과 체제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영향에 더해 자신의 권력‘세습’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중국을⁵⁶⁾ 우호적으

52)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11년 5월 26일.

53)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11년 5월 26일.

54) 리기성, “라선무역지대는 동북아시아지역 경제협력의 기본 거점,” 제10차 코리아학국제학술회의 논문집 (2011년 8월 24~25일) ; 송현철, “동북아시아 지역 내 경제협력의 강화와 조선반도중단철도,” Tumen River Academic Forum 2011 발표 논문집 (2011년 8월 21~22일).

55)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p. 165.

로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실제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1992년 초 김용순 비서를 미국에 특사로 보내 역사적으로 주변 강국들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전략적 가치를 탐내어 수많은 침략을 자행한 사례를 들면서 “동북아시아의 역학 관계로 보아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자면 미군이 와 있는 것이 좋다”고 미국에 말해주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김정일 위원장은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였다.⁵⁷⁾ 이는 김정일 위원장 스스로 동맹관계가 끝났다고 언급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을 지역 내 균형자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또한 2009년 방북하였던 현정은 현대그룹 부회장에게도 자신은 “중국을 믿지 않는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⁵⁸⁾ 김정일 위원장의 이러한 언급들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⁵⁹⁾

56)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모두 세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 중국의 전직 고위외교관에 따르면 마오쩌둥은 세습이 공산주의 원리에 맞지 않고 실제 공산주의권에서 가족 간 권력승계(family succession)는 없었다며 북한의 권력 세습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고 한다(You Ji, “China and North Korea: A Fragile relationships of Strategic Convenienc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0, no. 28 (2001), p. 389). 덩샤오핑도 공식적으로는 내정불간섭 차원에서 북한의 권력세습을 수용하였으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세습의 폐해를 언급했다고 한다(어우양산, 『중국의 대북조선 기밀파일』, p. 64).

57) 임동원,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서울: 중앙북스, 2008), pp. 115~116.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 이외에도 1992년 1월 김용순 조선로동당 비서의 방미, 2000년 10월 조명록 특사의 방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한 미군을 용인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왔다(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pp. 340~341).

58) Tokola, “Hyundai Chairwoman on DPRK Trip, Kim Jong-Il,” U.S. Embassy Seoul Cable (Reference ID: 09SEOUL1386, 2009.8.28.), (<http://wikileaks.org/cable/2009/08/09SEOUL1386.html>).

59) 한편 중국도 자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분석가들에 따르면 북한지도부는 중국지도부가 자신들보다 서방세계 특히 남한과 더 많이 대화하고,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가 미국이나 남한과 긴밀한 관계를 만들기

중국을 대국으로 보고 경계하는 인식은 김정은 제1위원장 시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권력교체기라는 특성과도 연관되어 중국에 대한 경계와 자주성 강조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최대 유산으로 핵과 인공위성을 들면서 이를 대국들 틈에서 자주성을 고수할 수 있게 해준 업적으로 선전할 뿐 아니라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의 압력이 클수록 자기의 주권을 더욱 확고히 내세워야 하며 자신이 결정한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한 김정일 위원장의 언급을 재확인하며⁶⁰⁾ 지배주의자(중국)에 맞선 자주성 견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은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한 연설에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가겠다고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지만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 더 귀중”하다며 인민군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유지할 것과 ‘총대’로서 강성국가건설을 담보할 것을 요구하였다.⁶¹⁾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평화보다 자주를 강조하면서 자주를 달성하기 위한 총대를 언급한 것은 “선군은 우리의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명”⁶²⁾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이 또한 주변 대국인 중국에 대한 경계와 자주성 견지의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이용호 외무성 부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협조할 가능성마저 있다고 본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China and North Korea: Comrades Forever?,” p. 16).

60) 김준혁, “자주정신의 강자로 된 인민,” 『로동신문』, 2012년 4월 7일.

61)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돛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김정은동지의 연설,”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5일.

62)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2012년 4월 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로동신문』, 2012년 4월 19일.

상이 2012년 3월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이 우리와 동맹을 맺고 핵우산을 제공하면 당장이라도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⁶³⁾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부각시켜 실리도 확대해보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IV. 결론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더 이상 혈맹으로 볼 수 없다. 동맹의 기초인 전략적 이해관계와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와 미·중 간의 경쟁을 주목하면서 자신의 지정학적 가치를 부각시킨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에 대항할 하나의 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북한의 정세인식이나 자신의 지정학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체제와 정권의 생존차원에서 자주를 강조한다.

북한의 자주성 강조는 대내 정치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외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인 현실에서 주변의 강대국들에 대한 자신의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강대국 속에는 중국도 포함되어 있다. 대국이나 지배주의자로 지칭되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과 경계가 자주와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 속에 녹아 있다. 중국의 부상이 야기하는 지역질서 변화와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북한이 탈냉전기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매달리면서 주한미군 용인입장을 간헐적이지만 일관되게 표출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외교-균형을 모색하는⁶⁴⁾ 배경이기도

63) “北리용호 ‘화려한 발언’…美신중행보,” 『연합뉴스』, 2012년 3월 13일.

64) 이상숙, “북미관계 개선 이후 북한의 대중정책: 미중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4권 1호 (2008).

하다.

따라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북한은 부상하는 중국에 끌려들어 가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확대를 통해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부상하는 중국이 대국이자 지배주의자로서 자신의 체제와 정권에 야기하는 위험성을 끊임 없이 경계하면서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북한이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활용가능한 방안이 선군과 총대이며, 대국들 틈에서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게 해주었다는 핵무기와 인공위성 즉 장거리미사일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경제협력이다. 북한은 중국을 통해 외자를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를 재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경제협력을 다변화시키지 못하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이 중국이라는 대국에 대해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해 선택한 핵무기와 미사일은 오히려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남한 등의 대북정책이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는 한, 경색과 유화국면이 교차하겠지만,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길은 없다. 이는 북한이 자주성 견지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 선군과 총대, 핵과 미사일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협력 다변화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길이 없음을 의미한다. 결국 북한의 자주성 견지가 북한의 대중국 의존을 심화시키는 역설적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로 출범한 김정은 정권도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보다 선군과 총대에 기초한 자주와 존엄을 강조하는 한 이러한 역설적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동성. 『한반도 동맹구조와 한국의 신대외전략』.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1.
- 우승지.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제관계론 이해.” 현대북한연구회 엮음. 『김정일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서울: 한올, 2009.
-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2000.
- 임동원.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서울: 중앙북스, 2008.
-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05.
-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 허문영·마민호.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서울: 선인, 2007.
- 매들린 올브라이트. 백영미 외 역. 『마담 세크리터리(Madam Secretary)』. 서울: 황금가지, 2003.
- 어우양산. 박종철·정은이 역. 『중국의 대북조선 기밀파일』. 서울: 한올, 2008.
- Hendel, Michael. *Weak State in the International System*, London: Frank Cass, 1981.
- Kim, Samuel S. and Tai Hwan Lee, *North Korea and Northeast Asia*,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2.
- Nadkarni, Vidya. *Strategic Partnerships in Asia: Balancing without Alliances*, New York, N.Y.: Routledge, 2010.
- Womack, Brantly. *China among Unequals: Asymmetric Foreign Relationship in Asia*, Singapore ; Hackensack, N.J.: World Scientific, 2010.
- 김강일. “북·중관계 현황과 변화전망.”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와 재외동포사회의 통일외식』. 평화문제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2010년 10월 14일).
- 김영운. “중국의 대북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한국의 과제.” 『정책과학연구』, 제 20집 2호 (2011).
- 김예경.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대응전략: 편승전략과 동맹, 유화 그리고 현안별

- 지지정책.” 『國際政治論叢』, 제47집 2호 (2007).
-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1980년 10월 10일).” 『김일성 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김홍규. “중국의 동반자 외교 小考: 개념, 전개 및 함의에 대한 이해.”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2호 (2009).
- 김홍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및 역할.” 제122회 홍사단 금요통일포럼 발표문 (2012년 3월 23일). <<http://uni.yka.or.kr/yka/board.php?board=pdsforum&command=body&no=57>>.
- 나미나. “일본의 대북외교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11월호.
- 남성욱.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5호 (2006).
- 로승일. “우리식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국제관계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존중하는 민주주의.”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53권 4호 (2007).
- 리기성. “라선무역지대는 동북아시아지역 경제협력의 기본 거점.” 제10차 코리아학국제학술회의 논문집 (2011년 8월 24~25일).
- 박창희. “지정학적 이익 변화와 북·중동맹관계: 기원, 발전, 그리고 전망.” 『중소연구』, 통권 제113호 (2007).
- 박홍서.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북 동맹안보딜레마 관리 연구: 대미관계 변화를 주요동인으로.” 『國際政治論叢』, 제46집 1호 (2006).
- 배종렬. “최근 북·중 경제관계의 특징과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2010년 겨울호.
- 서보혁. “북·중·러 3국의 협력 실태에 관한 세 가지 질문.” 『통일과 평화』, 제3집 2호 (2011).
- 송현철. “동북아시아 지역 내 경제협력의 강화와 조선반도중단철도.” Tumen River Academic Forum 2011 발표 논문집 (2011년 8월 21~22일).
- 오승렬. “북·중경제관계의 구조와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소고.”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1호 (2010).
- 원동욱. “동북공정의 내재화, 중국 동북지역 인프라개발의 전략적 함의.” 『국제정치논총』, 제49집 1호 (2009).
- 원동욱·김재관. “중국의 대북정책과 동맹의 딜레마: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2집 1호 (2011).
- 유승경.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 깊어지고 있다.” 『LGERI 리포트』, 2010년 9월 29일.
- 이기현.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동맹의 동학』. JPI 정책포럼, no. 2011-15

- (2011).
- 이상숙. “북미관계 개선 이후 북한의 대중정책: 미중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4권 1호 (2008).
- 이상숙.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의 북·중관계: 불안정한 북한과 부강한 중국의 비대칭적협력 강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4호 (2010).
- 이상숙. “북·중우호조약의 현대적 함의와 양국관계.” 『주요국제문제분석』, 2011년 가을호.
- 이용희. “북한 경제의 중국 예측화 현상에 대한 이해와 대응.” 『국제통상연구』, 제14권 1호 (2009).
- 이종석. “중·소의 북한 내정간섭 사례연구: 8월 종파사건.” 『세종정책연구』, 제6권 2호 (2010).
- 이종석.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 특징과 함의.” 『정세와 정책』, 2011년 7월호.
- 이태환. “북·중관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대외관계』. 서울: 한울, 2007.
- 장공자. “북한의 대중협상전략과 우리의 대응전략.” 『통일전략』, 제9권 2호 (2009).
- 최명해. “북한의 대중 의존과 중국의 대북영향력 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2010년 여름호.
- 최명해. “북·중조약의 현대적 함의와 북·중관계 전망.” 『중북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과 한미동맹』.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2011년 9월 1일).
- 최종건. “북한의 세계관에 나타난 국제정치이미지 분석-이미지 이론을 중심으로.” 이수훈 편. 『북한의 국제관과 동북아질서』. 서울: 한울, 2011.
- Edelstein, David M. “Managing Uncertainty: Beliefs about Intentions and the Rise of Great Powers.” *Security Studies*, vol. 12, no. 1 (Autumn 2002).
- Kim, Sung Chull. “North Korea’s Relationship with China: From Alignment to Active Independence.” in Lam Peng Er and N. Ganesan, Colin Dürkop, eds., *East Asia’s Relations with a Rising China*. Seoul: Konrad Adenauer Stiftung, 2010.
- Kuilk, Cheng-Chwee. “The Essence of Hedging: Malaysia and Singapore’s Response to a Rising Chin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30, no. 2 (2008).
- International Crisis Group. “China and North Korea: Comrades Forever?” *Asia Report*,

- no. 112 (February 2006).
- International Crisis Group. "Shades of Red: China's Debate over North Korea." *Asia Report*, no. 179 (November 2009).
- Lindell, Ulf and Stefan Persson. "The Paradox of Weak State Power: A Research and Literature Overview." *Cooperation and Conflict*, vol. 21, no. 2 (1986).
- Scobell, Andrew. "China and North Korea: The Limits of Influence." *Current History* (September 2003).
- You Ji. "China and North Korea: A Fragile relationships of Strategic Convenienc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0, no. 28 (2001)
- Tokola. "Hyundai Chairwoman on DPRK Trip, Kim Jong-Il." U.S. Embassy Seoul Cable (Reference ID: 09SEOUL1386, 2009.8.28.). <<http://wikileaks.org/cable/2009/08/09SEOUL1386.html>>
- Womack, Brantly. "Asymmetry Theory and China's Concept of Multipolarit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3, no. 39 (May 2004).
-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政策规划司 编. 『中國外交 2011年版』. 北京: 世界知识出版社, 2011.
- 朱鋒. "中朝关系中的同盟因素: 变化与调整." 『중북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과 한미동맹』.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2011년 9월 1일).
- 王緝思. "朝核问题与当前中韩关系." 『2010 한중평화포럼: 한중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비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학술회의 (2010년 9월).
- 『로동신문』, 『조선신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Xinhua*.

Abstract

North Korea-China Relationship and North Korea's Perception of Rising China

Chang, Yong Seok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This article analyzes the North Korea-China relationship.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ways in which their national interests in cooperation, dependence, autonomy, and conflict are intermingled, and it looks into North Korea's perception of rising China in the post-Cold War period in an attempt to grasp North Korea's policies toward China. Because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trategic interests and comprehensive threat assessment of the two countries, the North Korea-China relationship is no longer characterized as that of conventional blood allies but is rather a kind of strategic and asymmetric partnership. Paying attention to the changing regional order in East Asia as well as the rivalry between China and the U.S., North Korea plays up its geopolitical location to a strategic point. North Korea, wary of the increasing risks against its regime due to China's continual rise as a dominant power, has been showing distrust toward rising China and emphatically asserting its autonomy.

Keywords: strategic-asymmetric relation, changing balance of power, strategic location, autonomy, feelings of wariness.

장용석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행정관과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공저), “국가사회주의와 국가계급지배의 동태성: 북한 지배체제 연구에 대한 함의” 등이 있다.